[UCI]I804:24011-200000233310

*2006*年 *2*月

教育學碩士(一般社會)學位論文

韓・中 經濟關係의 發展과 새로운 協力課題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一般社會教育專攻

尹 花 心

韓・中 經濟關係의 發展과 새로운 協力課題

The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hip and New Cooperation Problem Between Korea and China

*2006*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一般社會敎育專攻

尹 花 心

韓・中 經濟關係의 發展과 새로운 協力課題

指導敎授　金 正 植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一般社會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5*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一般社會敎育專攻

尹　　花　　心

尹花心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印)

*2005*年　*12*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제목차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2

제2장 한·중 경제협력의 배경과 전개 ····· 3
제1절 한·중 경제협력 진전의 배경 ····· 3
1. 중국 개혁·개방의 배경과 과정 ····· 4
2. 중국 개혁·개방의 특징 ····· 6
3.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과 대 중국경제협력 전략 ····· 7
제2절 한·중 경제협력의 전개 ····· 10
1. 한·중 수교 이전의 경제협력 과정 ····· 11
2. 한·중 수교 이후의 경제협력 과정 ····· 14

제3장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 23
제1절 한·중 교역 및 투자협력 현황 ····· 23
1. 한·중 교역 현황 ····· 23
2. 한·중 투자협력 현황과 특징 ····· 32
제2절 한·중 산업협력 현황 ····· 42
1. 한·중 산업협력 전개과정 ····· 42
2. 한·중 분야별 산업협력 확대와 현황 ····· 45
제3절 한·중 경제협력 관계의 분석 ····· 48
1. 한·중 경제협력의 경제적 성과 ····· 48
2. 한·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 50

제4장 한·중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 54

제1절 한・중 교역의 활성화 방안 ····· 54
제2절 대중국 투자의 활성화 방안 ····· 56
제3절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과제 ····· 58
1. 대외적 측면 ····· 58
2. 내부적 측면 ····· 61

제5장 요약 및 결론 ····· 66

참 고 문 헌 ····· 68

<표차례>

<표2-1> 협력확대기의 한·중 관계 주요일지 ····· 15
<표2-2> 전환기의 한·중 관계 주요일지 ····· 20
<표2-3> 한·중 협력의 주요 현안과 전망 ····· 21
<표3-1>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 24
<표3-2> 한국 무역에서의 중국의 위상변화 ····· 25
<표3-3> 對中 10대 수출 품목 ····· 26
<표3-4>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출액 및 증가율 ····· 27
<표3-5> 對中 10대 수입 품목 ····· 28
<표3-6> 가공단계별 對중국 무역수지 추이 ····· 29
<표3-7> 중국의 對한국 20대 수입품목 ····· 31
<표3-8> 2004년 상반기 중국의 외자유치 동향 ····· 34
<표3-9> 중국에서의 국가별 투자순위(실제투자 기준) ····· 35
<표3-10> 한국의 對中 투자현황(실제투자 기준) ····· 36
<표3-11> 중국의 대 한국 업종별 투자현황(2003년 3월말 현재) ····· 41
<표3-12> 한·중 산업정책의 개괄적 비교 ····· 44

<그림차례>

<그림3-1> 중국의 對 한국 수출비중 추이 ····· 30
<그림3-2> 중국의 對 한국 수입비중 추이 ····· 30
<그림3-3> 중국의 對 한국 수출입비중 추이 ····· 32

Abstract

The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hip and New Cooperation Problem Between Korea and China

By Yun, Hwa-sim
Advisor : Prof. Kim Jeong-sik Ph.D
Major in General Soci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Since the policy of economic innovation and liberalization was implemented, Chinese economy has rapidly grown. As a result, China has become the 7th great economy power following the U.S.A, Japan, Germany, France, England and Italy. When it is considered based on purchasing power, it is estimated as the world second or third in scale.

In 1990s, Chinese economy recorded more than 10% increase of growth rat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growth will last for a considerable period. Western experts on China expect that China will surpass America in economy and be the world best in 2020.

When China with 1. 2 billions of population has kept their growth and becomes the great world power, it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international order as well as world economy. It is certain that Chinese economy will work as a serious challenge to the economy of Korea which is a neighboring country. Chinese products with competitive power because of their low price will compete with Korean products and as Chinese industry has advanced due to fast growth of its economy, competition areas between two nations will change from low and midium price products to high and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as Chinese economy is growing, huge market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are open to Korean business.

The advance of Chinese economy has a positive influence such as expansion of opportunities of Korean and Chinese economic exchange, but it gives burdens such as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nd gradually decreasing difference in technology between two nations. However, the two countries should focus on preparation of a economic exchange system that can improve global competitive power through free use of their competitive resources. So far, as they have developed such friendly relations,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ill progress more closely.

Although occupancy rate of Chinese products in overseas markets for the past 10 year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Korean occupancy rate in main markets has been kept. So, it is judged that Korean industries have managed threat of China well. However, as Chinese industrial structures has been rapidly advanced, it is possible for the threat of China in overseas markets to increase. In addition, if Korea does not prepare more advanced economic systems and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domestically continuing restructuring, Korea may face difficulties such as loss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export markets. As China joined in WTO and its markets have been expanded,

investment conditions are improved and its policy to attract international investment is becoming more inviting. At the same time,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has rapidly been progres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preparation of desirable relations with China which is an enormous threat as well as a chance to Korea.

Finally, this study carried a bibliographical analysi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and collected data presented by Korea Export and Import Bank, Samsung Economy Research Institute,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Resources, Korea Trade Association, the Ministry of Diplomacy and Commerce and Industrial Research Center.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중국경제는 1970년대 후반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1] 사회주의 시장경제 지향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이미 1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중국경제는 21세기에도 고성장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

13억의 인구를 지닌 중국은 지속되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이는 세계경제뿐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은 인접국인 우리 한국 경제에 크나큰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상품은 국내외에서 우리 상품과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중국산업이 고도화함에 따라 양국 상품 간 경쟁영역은 점차 중·저가제품에서 중·고급기술을 요하는 제품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간 무역량이 증대하고,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한국에게 중국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거대한 상품시장 및 투자대상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경제의 부상은 한국에게는 수출시장에서의 경합관계심화 및 점점 좁아지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라는 압박과 함께 한·중 경제교류의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리즘 속에 내부적으로는 블록연대의 강화라는 특징을 갖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동북아지역의 중요국가인 양국의 교류협력은 더욱 발전되어야 할 지속적 과제이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교류 시스템을

---

1) 구매력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중국경제는 이미 규모면에서 세계 2~3위로 추정되고 있다.

2) 서방의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경제가 2010년 혹은 2020년에 규모면에서 미국경제를 능가하여 세계제일의 경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대두되고 있다.

구축하는데 함께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은 한·중 수교 13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온 바, 앞으로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보다 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한·중 수교이후의 경제협력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한·중 경제협력 중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역, 산업, 투자에 관하여 한·중 관계의 경제협력 현황을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중 관계에 있어 문헌과 자료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는 문헌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시간적 공간적 내용의 체계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경제사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주된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산업연구원 등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구성을 밝히고 제2장은 한·중 경제협력의 배경과 전개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으로서 한·중 교역 및 투자현황과 산업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5장은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한・중 경제협력의 배경과 전개

제1절 한・중 경제협력 진전의 배경

1970년대 말 중국은 고도로 집중된 저효율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로, 농촌에서 농가청부생산책임제를 실시하고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권한의 하향이양과 이익유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 존재를 인정하였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적 자원배분제도에 대해서 개혁을 실행하는 동시에 점차로 생산물과 생산요소 가격에 대한 통제를 완화 내지 포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외자를 도입하고 무역을 확대하며 외자 독자 기업 및 합자기업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4반세기에 걸친 경제개혁을 통하여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는 전형적인 계획경제로부터 시장이 자원배분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시장경제체제로 탈바꿈하였다. 그 결과 중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이 빠르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로 변모하였다.[3)]

1. 중국 개혁・개방의 배경과 과정

중국은 192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국공 내전으로 인해 공산당 통치 이전부터 경제가 극도로 피폐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래 지주 세력 타파를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을 서두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토지개혁의 무리한 단행과 농민이 대다수인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경제발전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또한 1960년대 초에는 중・소 분쟁에 따른 소련의 대중원조 중단과 기술자 철수, 인민공사회 및 대약진 운동 등 자력갱생원칙에 의한 자립경제정책과 그 실패,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경제기반의 위축과 왜곡현상은 어

3) 린이푸외,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백산서당 : 2001), pp.18～19.

려움을 가중시켰다. 이같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에서부터 개혁개방 추진 이전까지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모순과 전화, 조정의 악순환을 겪어왔다.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혼란과 모순은 중국이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미 문화 대혁명 말기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등소평은 모택동의 모든 것을 추종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체제의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한편 중국은 이미 70년대 초부터 대외경제 전략에 있어서 친서방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국가들과 국교수교나 통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79년에 미국과 수교함으로써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개방의 기반과 환경을 다져왔다. 국내적으로는 등소평 체제가 성립되면서 일찍이 주은래가 주장한 4개 현대화 추진을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4개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정식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개혁개방의 시발점이 되었다.

중국은 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 세력이 당내 다수파를 장악하면서 개혁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 개혁세력은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할 최대의 과제라고 선언하고, 사상해방, 체제개혁을 하는 동시에 대담한 문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세력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서방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일부의 주장이 개혁세력의 개혁·개방 추진방향은 아니었지만 당내 보수파는 이에 크게 반발하였고 개혁세력을 비판하였다. 보수파들도 개혁개방이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보수파들에게 있어 개혁개방은 사회주의의 개선과 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체제를 부인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는 받아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보수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등소평은 이른바 4항 기본원칙을 선언하였다. 중국이 추구하는 개혁개방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변혁과정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질서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쉽과 정치사회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

였고, 이를 위해서는 개혁세력은 4항 기본원칙의 견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개혁개방은 '4항 기본원칙'과 자본주의국가의 선진기술의 도입이라는 상호모순적 성향을 안고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기존의 사회주의 질서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 분야, 즉 농촌경제와 대외경제 분야에서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하는 것이었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범위를 확대 심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렇게 개혁·개방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는 당내의 갈등도 있었으나 매 단계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적 리더쉽에 의해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타협과 조정에 의한 정책은 현실적 성과에 의해 스스로 입증되며 개혁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 중국 개혁·개방의 특징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그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혁·개방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첫째로 8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의 심화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개방이 연안 지역에 집중되면서 중국 연안과 내륙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문제였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시작할 때 개혁파는 경제건설의 목표를 3단계로 설정하였다. 제1단계는 1990년까지 1980년 총 생산량의 두 배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미 1988년에 달성하였다. 제 2단계는 2000년까지 1980년 총생산량의 네 배를 달성한다는 것이었고 3단계는 21세기 중반까지 2000년 총생산량의 네 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단계 역시 달성되었고 3단계의 달성도 이런 추세라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개혁·개방 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1세기 중반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체제붕괴와 해체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중국식 개혁개방이 성공할 수 있었던 다른 요인은 등소평을 중심으로 형성된 광범위한 반좌파 개혁연합세력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개혁세력은 문화대혁명의 피해자이며 기존의 모택동 체제의 가장 심각한 희생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존체제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는 개혁지지 추진세력들이었다. 인민들 또한 문화대혁명과정을 통해 모택동의 급진적 좌경노선이나 관념체계로는 중국의 발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이후 중국의 지도부는 거의 모두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실의 검증을 통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였고 그렇게 입증된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는 보수파와 개혁파들도 모두 수용하였다.

중국의 등소평 체제는 기본적으로 등소평을 조정자로 하는 상호 분업적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했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은 등소평 1인 결정이 아니라 집단적 결정이었고, 정책결정에는 갈등의 조정을 위한 타협이 필요했다. 등소평은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게 했다. 또한 이런 추진 과정에서 이념적 대응장치 없이 기존체제나 이념의 수정을 추진하는 경우 보수세력으로부터 치명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등소평은 수정에 앞서 그 수정을 합법화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나 틀을 당의 결의로 확립해 가는 과정을 선행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공고히 하였다.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절실했던 비사회주의적(자본주의적)요소의 도입을 위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확립한 것은 등소평의 우회적 접근방식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농촌경제와 대외경제 부분에서 시작하여 도시지역의 국유기업으로 확산되었으므로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핵심부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었고, 농촌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적극적 호응과 대외개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할 수 있었다.

개혁·개방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다른 서방국가와의 수교나 통상

회복으로 유리한 국제환경을 맺고 있었으며, 세계에 나가 있는 동포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인 투자, 그리고 각 지역의 특수성과 운영방식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다양성이 가능했던 것이 경직되고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3.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과 대 중국경제협력 전략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국익이 이데올로기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고 있으며 평화공존의 방식이 가장 생명력 있는 생존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냉전 종식 후 양극 구조가 해체되면서 국제사회의 다극화, 다양화 추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세계각국의 자주독립 및 평화외교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한·중 양국의 관계개선에 양호한 국제적 환경조건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중·일, 중·미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외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한 변화로는 첫째, 한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주력하게 되었고, 둘째, 한·미 관계를 강화함과 더불어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여 선린 우호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 셋째, 대외교류를 적극 확대하고, 특히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한국과 한반도지역의 번영 촉진에 힘씀으로써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외적 환경조성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1973년 6월 23일 한국은 <6·23선언>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으며, 같은 해 3월에는 중국과 서해 석유자원을 함께 개발한 의향이 있음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몇 개월 후 중국도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서해 석유자원을 개발할 용의가 있음을 표현했다. 1974년 한국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우편물 교환금지 규정을 해제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의 조선족들이 적십자사를 통하여 한국내의 친척과 서신교환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두환 정부는 또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정책'을 제시하고 교차승인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정세를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남북한 통일을 촉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냉전이 채 종식되지 않은 상태였고,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추호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소련 역시 북한과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의 유일한 합법성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때문에 한국과 중국·소련과의 관계는 비록 1970년대 후반기부터 차츰 풀리는 조짐을 보였지만 한반도에 대한 중·소 기본정책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관계는 단지 비정부 차원의 외교에만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북방정책의 효과를 보기에는 매우 힘든 상태였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래 외교정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의 '문호개방 정책'과 '북방정책'을 계승하였으며, 외교정책 전개에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신축성을 보였다. 이 시기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개방과 함께 소련 고르바초프 역시 개방과 민주화를 제창하고 나섬으로써 미·소 관계가 신속히 완화된 것을 시발점으로 국제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1988년 7월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중·소를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 특히 중·소와의 국교정상화와 유엔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을 설득시키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사회주의 각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기도 했다. 1989년 2월 한국은 헝가리와의 국교관계 수립을 돌파구로 1990년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하였다.

이처럼 역대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중시해야만 했을까? 이는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을 모색하고, 대북한 관계에서 유리한 정치적인 조건을 창출하며, 광대한 중국의 시장성과 자원에 착안, 양국간 경제무역 교류의 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 한국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정치질서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한·중 수교는 한국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하였다. 동북

아 질서가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지리정치학적 질서'에서 경제핵심의 '지리경제학적 질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국도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외교적인 입지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중 수교는 대 중국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였으며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 등 정부간 협정으로 과거의 민간차원 협정을 대체함으로써 경제 및 다른 부문에서 양국관계의 원활하고 신속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교관계 정상화로 지난날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종지부를 찍고 호혜평등의 기초위에서 새로운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시작한 이래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방면에서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는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양국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 방문은 양국이 정치적으로 많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고, 점차적으로 양국의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한·중간 경제·무역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음 4가지 추세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협력방식이 과거의 상품교환 위주에서 산업기술협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둘째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총규모와 단일 프로젝트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투자의 주체도 중소기업 위주에서 대기업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셋째는 대중 투자지역 범위가 중국의 일부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양국의 산업 기술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양국관계 정상화 이후 경제나 무역분야의 협력이 즉각적으로 우세를 나타냈는데, 주요인은 객관적인 상호 보완성과 주관적인 호혜평등 원칙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국의 경제는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신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상당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고화질TV등 첨단기술과 자동차 및 부품 생산기술을 중국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기초과학, 국방 및 첨단기술면에서 세계선진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 분야에서 한국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자원과 투자시장, 우수하고도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 모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국 모두가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정치·경제적 장점을 보완하는 것 이외에도 협력 가능한 다른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 지리적인 인접성과 문화적인 동질성, 감정상의 친근성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경제협력에서 서로 이념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협력의 의의를 증강시키고 협력을 위한 유리하고도 양호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제2절 한·중 경제협력의 전개

1. 한·중 수교 이전의 경제협력 과정[4)]

(가) 적대기(~1970년대 중반이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직후 중국은 한국전쟁에 북한지원국으로 참전하였고, 그 이후 한국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소분쟁의 결과 대소의존적 대외경제정책으로부터 중국이 친서방화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한국 정부가 문호개방 정책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과 접촉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76년 4월, 故박정희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 Robert Muldoon을 통해 북경에 평화메시지(message of peace)를 보냈으나 반응이 없었고, 그 밖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주동적 접근에 좀처럼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 지도자는 남한과 정치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당시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중국은 남한과의 접촉에 대한 개방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5)]

---

4) 양영자, 『한중경제교류협력의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만 중국문화대학, 2001.1.30), pp.162-165.

5) Ipyong J.Kim, "Policies Toward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Youngnok Koo and Sung-joo Han eds., The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New York : Clumbia

(나) 제한적 협력기(1970년대 후반~1992년 수교이전)

1980년대 이전 중국과 남한의 관계는 약간의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1974년 중국은 한국과의 우편 왕래를 허가하였으며, 1976년 중국 영해를 침범한 남한 어민을 석방하였다. 경제교류부문에 있어 쌍방은 1976년부터 홍콩, 싱가포르 또는 일본을 통해 간접 무역의 형식으로 한국은 에너지 자원 부족시 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여 석유를 대신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전자제품, 방직품, 화학비료 등을 수입하였다. 이렇듯 쌍방의 관계는 약간의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사실상 위의 예를 제외하고는 다른 접촉은 없었다.[6)]

북경의 서울에 대한 태도는 1980년대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당시 중국 외교부장 黃華는 1980년 1월 25일 한 보고 연설에서 중국의 남한에 대한 정책은 「문만 닫았지 빗장은 지르지 않았다(the door is closed but not locked)」.[7)] 라며 양국 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1983년 5월 탁장인 여섯 명의 중국민항기 납치사건을 필두로 해서 1985년 2월 중국 해군의 어뢰정 사건, 1986년 마효빈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공식 접촉하면서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

1988년을 기해 북경과 서울과의 관계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다. 前노대우 대통령은 임기 내에 중국과의 전면 정상화 관계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한국과 중국은 급기야 직접 무역을 약속한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조루양은 이 정경분리의 개념을 해석하며 중국과 남한의 관계는 단지 경제무역 관계일 뿐 정치적 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교류의 대부분은 간접적·민간적 교류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후 타국의 성공적 경제발전 경험을 배워야했으며, 남한으로부터 중국이 필요한 기술경험과 자본의 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타산아래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한과의 접촉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University Press, 1985), pp.209-214.

6) 林秋山, 『中共與韓國改善關係之展望』, 『中國大陸』, (臺北 : 弟200期,國民73年4月), pp.42-45.

7) Chu Sung Po, "Peking 's Relations with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1980s," Issues and Studies, Vol.22, No.11(Taipei : November 1986), p.71.

어쨌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완화 정책후 중국의 요녕, 산동, 길림 3개성 은 1988년 3월부터 서울에 무역사무소 설립에 대해 조금씩 흥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8], 1988년 7월 1일 요녕성에 무역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1988년 8월 산동성에도 무역사무소를 설치[9]하였다.

1988년 11월, 한국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무역관계의 추진을 위해, 특히 중국과의 상업 활동을 위해 정책 제정 조절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민간기업은 1988년 10월 「한국국제민간경제협회(IPECK)」를 설치 공산주의 국가중의 비슷한 조직과 연계 협조하였다. 양국의 민간경제협력방면에서는 한국의 국제민간협의회(IPECK)와 중국의 국제상회(CCPIT)간에 「중(공)한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당시 성급(省級)의 무역사무소를 정부급으로 단계를 향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북경 측은 여전히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집하였다.

1989년 5월 4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에는 이규성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22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가하였고, 이규성 장관과 김건 한국은행 총재등은 중국의 양상곤 국가주석 및 조루양 총서기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한국의 각료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의 지도층을 예방한 것은 이것이 최초였다.

19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 이후 최호중 외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북경내부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남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10]며 남한정부의 對中 경제교류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천안문 사태는 북경과 서울간의 긴장 상태를 조성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개혁개방노선을 견지한다면 중국은 여전히 남한의 무역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1989년 8월 19일에는 대한항공의 전세기가 최초로 상해에 취항하여 핸드볼 선수단 등 151명의 승객을 수송했으며, 또한 인천과 중국의 威海간의 카페리가 같은 해 9월 15일에 처녀 취항을 하는 등 항공 및 해상 교통의 개통이 이어졌다.[11]

---

8) FBIS, East Asia, Augst 8 1988, p.30.
9)『한국일보』, 1989.9.3
10) FBIS, East Asia, June 8, 1989, p.28.
11) 『동아일보』, 1989.9.15.

중국은 89년 1월 6일 KOREA도쿄 무역관을 통해 민간 차원의 양국간 무역 대표사무소 설치를 정식으로 한국측에 제의 후 한·중 양국은 90년 11월 24일 무역대표부 설치 결정을 발표, 한국은 1991년 1월 北京에 노재원 대사를 초대 대표로 하는 중국 주재 무역대표부를 설치, 이를 창구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 등 본격적인 쌍무 문제를 협의[12]하였다.

1980년부터 수교가 이루어졌던 1992년까지 양국간의 교역은 매년 평균 약 40.7%의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비약적인 증가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항기 사건이 있은 직후인 1985년과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 사이에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대중투자 또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5건, 140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액은 1990년에도 13건, 960만 달러로 증가했고, 1991년에는 61건, 260만 달러였다.[13]

그러나 무역에 비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많은 장애를 안고 있었다. 상호 공식적인 관계의 부재로 인해, 상호 인적교류에 있어 비자 문제의 발생,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 간접적인 계약 체결 등이 모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14]

한·중 양국인의 상호교류는 1986년의 서울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80년대 중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까지는 한국인의 방중보다 중국인의 방한이 많았으나, 7·7선언 이후 공산권에 대한 여행이 과거보다 자유로워짐에 따라 양국인의 상호 방문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규모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2. 한·중 수교 이후의 경제협력 과정

(가) 한·중 수교 협력 확대기*(*한·중 수교~*1990*년대 후반*)*

12) 홍덕화, “두 개의 중국과 실리외교”,『자작아카데미』, 제3판(1999.7) : 세미나 결과보고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4.9), p.28.
13) 이주영, 『중국의 신 외교전략과 한중관계』, (나남출판, 1998.10), p.239.
14)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1998.8), pp.222-223.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양국간 공동의 정치적인 현안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수교 직후인 1992년 9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가져 쌍무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이어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있었고, 양국 정부는 「무역협정」, 「상호투자장려·보호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경제·무역·기술 연합위원회 설립협정」등을 서명하였다. 11월 25일에는 중국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방한 「중한과학기술협력양해비망록」에 서명하였고, 물자부 장관 및 건설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한국 경제기획원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장관급 상호 방문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밖에 12월 6일 중국 무역 촉진위원회 부회장 催玉山이 방한하였으며, 12월 14일에는 양국 정부간 제1차 경제기술협력 연합위원회 회의가 북경에서 열려 쌍방 무역 협상 및 향후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15]

15) 양영자, 전게논문, pp.165-168.

<표2-1> 협력확대기의 한·중 관계 주요일지

1992.01	노태우 대통령 방중
02	한·중 의원친선협회 결성
1993.06	중·한 의원친선협회 결성(의회교류활성화)
07	상해 총영사관 설치
09	부산 총영사관 설치(중국측)
11	APEC회담시(시애틀) 김영삼 대통령-강택민 주석 회담
1994.03	김영삼 대통령 방중
09	청도 총영사관 설치
10	이붕 중국국무원 총리 공식방한
11	APEC 회담시(인니 보고르) 김영삼 대통령-강택민 주석회담
1995.01	한·중 의원친선협회를 한중 의원외교협의회로 개편, 의회차원의 대중 외교활동 본격추진
03	코펜하겐 UN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시 김영삼 대통령-이붕 총리 면담
04	한중 의원회교협의회 제1차 합동회의 개최(북경)
05	이홍구 국무총리 공식방중
11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방한
1996.03	방콕 ASEM정상회담시 감영삼 대통령-이붕 총리 회담
11	APEC(필리핀 마닐라) 회담시 김영삼 대통령-강택민 주석 회담
11	로마 세계식량정상회의시 이수성 국무총리-이붕 총리 회담
1997.01	APEC(캐나다 벤쿠버) 회담시 김영삼 대통령-강택민 주석 회담

자료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한·중 수교직후 양국간의 첫 번째 교류는 문화교류부터 시작된다. 8월에서 9월까지 중국 고궁 박물관 明淸畵展이 한국에서 열렸으며, 11월에는 중국 天律잡기단이 방한 연출하였다. <표2-1>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한·중 수교 직후 문화교류로부터 시작하여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 비교적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1993년 2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3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주임 馬洪이 방한하여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3월 9일에는 중국 정부가 조직한 중국 장각유역 투자설명회 대표단이 방한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한·중 수교이후 첫 차관 즉, 한국이 길림성에 1.4억 달러의 차관협의에 서명하였다. 5월 20일에는 중국무역전람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중국의 17개성·시의 93개회사와 기업체가 참가하여 한·

16) 중화인민공화국외교사연구실, 『중국외교개람』, (북경 : 세계지식출판사, 1993.10), pp.40-42.

중 수교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대형 전람회였다. 5월 25일 중국인민은행 서울 사무소를 개업, 7월 1일 양국은 「중한공간기술협력양해비망록」에 서명하였다. 7월 2일에는 한국 체신부장관이 방중, 「우편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1993년에는 두 차례에 걸친 투자설명회가 있었고, 5월 19일 한·중 양국은 1.4억 달러의 제1차 한국차관을 중국에게 제공하기로 서명했다. 1993년에는 양국 도시간 교류가 활발해져 8월 상해와 부산의 友好省市結成協儀書 체결을 계기로 10월 북경과 서울, 12월 인천과 천진 등의 양국 省市 혹은 市와 市간의 자매결연 현상이 두드러졌다.[17]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은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10월 이붕 총리의 방한으로 이어지며, 장관급 방문으로는 6월 당가선 중국의 외교부장관의 방한, 10월 한국 노동부 장관, 총무처 장관등이 방중했으며, 특이할 만한 사실은 1월 당시 한국 이만섭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방문과 3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대표단의 방중으로 양국간 정치적 교류·협력관계는 입법부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양국 국회차원의 교류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경제와 무역관계 부문에서는 3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시 양국은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와 탈세방지 협정」과 「문화협력」에 서로 서명했고, 6월 「중한 산업협력위원회 성립에 관한 협의」와 「민용 항공 공업기술 협력과 개발의 양해 비망록」을 체결했으며, 10월 이붕총리 방한시「민용항공임시협정」,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협정」과 「민용항공기개발비방록」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의 산업 협력 교류의 기초를 다졌으며, 6월 한·중 양국관계는 단순한 경제무역 교류에서 산업기술교류로 확대 발전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 한국정부는 중국에 345.08억원(약43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서명하였다.

1995년도의 특이할 만한 사실은 양국에서 상호 방문한 경제무역대표단 중 성급 대표단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6월 호북성대표단을 시작으로 7월에는 해남성 대표단이, 8월에는 호남성, 9월에는 사천성대표단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국을

---

17)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외교사연구실, 『중국외교개람』,(북경 : 세계지식출판사, 1994, 12), pp.35-40

찾았으며, 10월에는 서울시가 중국을 찾았고, 동월 경상북도 지사는 중국의 하남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 하나의 특이할 만한 사실은 중국의 언론인사, 중국 신화사 곽초인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18)]

1996년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업 회장·사장단의 중국방문이 두드러진다. 5월 현대의 정몽구 회장, 10월 포항종합제철 김만제 사장, 11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12월 현대그룹 정몽헌 부회장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의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5월에, 감찰부 부장이 10월에 각각 방한했으며 한국 경찰청장이 11월 중국을 방문했다.[19)] 또 6월에는 한국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12월에는 중국 국방부 外事局 국장이 각각 상호방문했다.

1997년도의 경제협력과 무역관계 부문은 5월 중국 노동부 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간에 「직업배훈합작협의」를 체결하였으며, 8월 26일 양국은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협의를 달성했다. 10월 이기호 노동부 장관과 한기복 국제협력단 총재가 방중, 양국은 「중한합작재화건립노동취업배훈중심적협의」를 체결하였다. 경제교류의 특이할 만한 일은 1997년에는 중국 각 省의 부성장급 교류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3월 산동성 인대상안회의 부주임과 호남성 부성장이, 4월에는 절강성 부성장이, 5월에는 귀주성 부성장이, 7월에는 복건성 부성장이, 8월에는 흑룡강성 부성장이, 10월에는 천진시 부시장이, 11월에는 해남성 부성장이 각각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1995년 성장급 방문과 두드러진 비교를 나타내며, 이는 그만큼 양국의 경제교류가 안정과 발전을 거듭했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협력 부문에서는 4월 한·중 양국 정부간의 과학협력협의에 의해 중한신재과합작중심을 북경의 유색금속연구총원에 설립하였고, 이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했다. 군사교류 부문에서는 4월 박용옥 한국 국방부 장관이, 11월에는 역시 한국 이정린 국방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하였다.[20)]

---

18)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외교사연구실, 『중국외교개람』, (북경 : 세계지식출판사. 1995, 2), pp.32-36.
19)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정책연구실, 『중국외교1996』, (북경 : 세계지식출판사, 1996, 8), pp.33-37
20)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정책연구실, 『중국외교개람1998』, (북경 : 세계지식출판사, 1998,6), pp. 38-41.

(나) 한・중 수교의 전환기(한국의 *IMF*관리체제～최근)

1998년 2월, 한국 자유민주연맹 김종필 명예총재가 중국을 방문했으며, 4월에는 중국 국가 부주석 호금도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 해 11월에는 중국 국가주석 강택민의 요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원수의 회담중, 강주석은 한・중 수교 6년이래 양국관계의 발전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한・중 수교 6년이래 정치부문은 양국 영도자의 수차례의 상호 방문과 국제활동중의 회담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켰으며, 양국관계의 발전을 추진해 왔다.

경제부문에는 양국의 상호 협력이 부단히 심화되어 피차간의 서로 중요한 무역동반자가 되었으며, 문화・교육・과학기술 등의 영역의 교류 역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양국은 지역과 구제업무 속에서의 협력과 협조 역시 진일보 강화되었다며 양국은 아직도 커다란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연합성명」을 통해 수교 6년이래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영역에서의 주목할 만한 선린우호협력관계의 발전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며, 이는 양국의 각자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공헌을 한 것이라고 여긴다고 했다. 쌍방은 UN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연합성명의 정신 및 수교후 양국의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기초로 미래에 착안하여, 「21세기를 향한 한・중협력동반자관계」를 건립할 것을 상의, 결정하였다. 방문기간에 양국정부는 「中・韓刑事法協助條約」, 「중한 비자수속 간소화와 복수비자발급에 관한 협정」, 「中・韓兩國政府靑少年交流諒解備忘錄」과 「중국 철도부와 한국 건설교통부 철도 교류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또한 「어업협정」의 초안을 작성했다.

<표2-2> 전환기의 한·중 관계 주요일지

1998.04	런던 ASEM정상회담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주용기 총리 회담
11	김대중 대통령 방중
1999.09	APEC(뉴질랜드 오크랜드)회담시 김대중 대통령-강택민 주석 회담
11	ASEM+3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주용기 총리-오부치 총리간 정상 조찬회
2000.09	UN새천년 정상회의(뉴욕)시 김대중 대통령-강택민 주석 회담
10	서울 ASEM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주용기 총리 회담
2001.11	브루나이 ASEM+3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주용기총리-고이즈미 총리 조찬회동 및 김대통령-주총리 회담
2002.09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 계기 김대중 대통령-주용기 총리 회담
10	APEC(멕시코)회담시 김대중 대통령-강택민 주석 회담
2003.07	노무현 대통령 방중
10	APEC(태국방콕)회담시 노무현 대통령-호금도주석 회담

자료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다) 한·중 수교 이후의 성과[21)]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수교 11년 만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정치, 군사, 문화, 지역협력등 전 분야에 걸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1)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한중수교 10주년 명암과 과제", 『월간 아태지역동향』, (2002.9), pp.77-79

<표2-3> 한·중 협력의 주요 현안과 전망[22)]

	현 안	전 망
경제·통상 분 야	· 무역 및 투자 확대 · 대중투자 애로사항 해소 · 첨단기술, 산업등 협력사업 추진 (IT,BT,NT) ·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 교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마찰 확대 · 한중투자보장 협정 개정으로 투자환경 개선 · 첨단기술의 중국이전 가속화와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 · 역내 중국의 경제적 지위강화
정치·군사	· 북한 핵문제 · 대만문제 · 한반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정착	· 북핵문제 원칙합의 (구체적 해법은 시간이 걸림) · 우리와 대만관계 악화 우려 · 중국의 아시아 리더국 부상
문 화, 기타교류	· 인적·문화적 교류강화 · 환경협력	· 다양한 교류확대 전망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1) 경제교류의 확대

수교 당시인 1992년 26.5억 달러였던 대중 수출은 2001년 181.9억 달러로 6.7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 증가폭(1.9배)을 크게 앞질렀으며, 중국은 1992년 우리나라 제 6위의 수출 대상국 이었으나, 2001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2위로 부상하였다. 대중 무역수지는 한·중 수교이전 해마다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였으나, 수교를 계기로 1993년부터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1992년 수교 이후 對中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 투자기업의 한국산 원자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對中투자는 1991~1992년 기간 중 239건, 1.8억 달러였으나, 1993~1994년 기간에 1,222건, 8.9억 달러로 늘었고 이후 급증세를 보여 왔다. 이로써 중국은 우리의 제2위 수출대상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

수교이후 민간차원이나 자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교류행사를 제외한 양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문화교류행사는 상당히 진전되어 왔다. 양국은 1994년 3월 28일

22) 정상은, "중국경제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제409호, (2003.7.16),p.15.

문화협정을 체결한 뒤 2년마다 문화교류 시행계획서를 체결하였고 또한 양국은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와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양국의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는 소의 韓流라로 불리우는 한국대중문화가 중국으로 급속하게 전파이다. 그리고 수교이후 관광분야에서의 양국간 인적교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 정부가 1998년 한국은 자유관광지역으로 전격 선포한테 이어서 중화권에 한류가 형성되면서 방한 중국인인 10년만에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은 1992년 8만명에서 2000년 44만명, 2001면 48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2004년에는 62만 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한국인의 중국 방문자수가 92년 4만명 에서 2001년 167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난해 2004년에는 28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정치・안보분야에서의 관계 개선

정치・외교측면에서는 80년대 이전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상대체제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였다. 이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을 유일한 동맹국으로 인정하였으나 실리를 중시하여 한국을 동반자로서 대우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이 남북한에 대하여 균형 있는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이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국이 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가까운 한국과의 군사・외교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3장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한·중 교역 및 투자협력 현황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양국 수교이래 경제무역협력관계에 있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0년 양국의 교역액은 345억 달러에 달하여 수교 당시보다 약 7배나 증가하였다. 2001년 1~10월중 교역액은 이미 295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기업의 대 한국 투자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한·중 교역 현황

(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 및 수입 현황

수교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쌍방 무역액은 매년 40%의 속도로 증가[23]하였는데 이는 수교를 기점으로 양국간 산업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에 힘입은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총액은 지속적인 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한·중 양국간 교역은 세계경기 침체등의 여파로 그간의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특징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이때 대중 수출은 181.9억달러에 그치면서 1.4%가 감소했으며 대중 수입은 133.0억 달러로 3.9%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대중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23.8%와 15.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표3-1>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

23) 『人民日報』(北京), 1998.11.10, 第6版.

<표3-1>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전년대비증감율%)

	2003년			2004년			2005년 (1~6월)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 체	*1,938*	*1,788*	*150*	*2,538*	*2,245*	*293*	*1,365*	*1,240*	*125*
미 국	342(4.39)	248(7.85)	94	428(25.2)	288(16.0)	140	201(-2.1)	152(10.4)	49
캐나다	27(14.59)	19(0.79)	8	34(26.1)	22(17.7)	12	17(12.1)	12(6.2)	5
E U	249(14.72)	194(13.3)	55	378(52.0)	242(24.8)	136	211(16.0)	133(8.8)	78
일 본	173(14.09)	363(21.63)	-190	217(25.6)	461(27.1)	-244	118(11.1)	237(4.0)	-119
ASEAN	203(10.07)	185(10.16)	18	240(18.6)	224(21.3)	16	131(12.0)	123(13.2)	8
중 국	351(47.81)	219(25.92)	132	498(41.7)	296(35.0)	202	291(23.5)	188(39.5)	103
홍 콩	147(44.44)	27(61.38)	120	181(23.7)	33(19.5)	148	72(-30.8)	9.7(-53.7)	62.3
싱가포르	46(9.82)	41(19.23)	5	57(21.9)	45(9.1)	12	33(24.1)	25(12.6)	8
러시아	17(55.66)	25(13.72)	-8	23(41.0)	37(45.6)	-14	19(76.2)	20(19.8)	-1
아시아	993(28.43)	871(20.42)	122	1,295(30.4)	1,112(27.8)	183	697(9.4)	607(12.4)	90
북 미	369(5.07)	267(7.32)	102	462(25.3)	310(16.1)	152	218(-1.1)	164(10.1)	54
유 럽	319(18.08)	248(13.56)	71	446(39.8)	305(23.3)	141	256(19.9)	165(8.2)	91
중남미	88(-0.7)	46(22.76)	42	116(31.4)	67(44.8)	49	69(30.0)	33(-1.5)	36
중 동	86(14.58)	269(28.96)	-183	110(28.1)	337(25.0)	-227	59(14.3)	205(36.7)	-146
아프리카	31(8.98)	20(18.99)	9	56(80.6)	28(42.0)	28	37(10.6)	15(-4.6)	22
대양주	49(34.7)	68(-0.8)	-19	49(0.4)	85(25.6)	-36	28(28.1)	51(26.5)	-23
기타지역	2.8(103.8)	0.3(-4.5)	2.5	3.6(28.5)	0.4(55.7)	3.2	1.7(-23.8)	0.3(194.1)	1.4

주) EU (2004년 5월부터 15국 → 25국으로 변경)

자료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http://db.kita.net) (2005. 8. 3일 현재)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793억 달러로 연평균 23.4%씩 증가하였다(전체교역은 9.6%씩 증가). 대중국 교역액의 중국순위는 1992년 5위에서 2004년 1위로 올랐고 중국의 비중은 92년 4.0%에서 2004년에는 16.6%가 증가하였다.

<표3-2> 한국 무역에서의 중국의 위상변화[24)]

(단위 : 억달러)

연 도	총교역	수 출	수 입
1992	64(5위)	27(6위)	37(5위)
2004	793(1위)	498(1위)	296(2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2년 27달러에서 2004년 498억 달러로 연평균 27.7%씩 증가하였다(전체수출은 10.5%씩 증가). 중국의 순위는 1992년 6위에서 2004년 1위로 뛰어 올랐고, 중국의 수출비중은 1992년 3.5%에서 2004년 19.6%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1992년 37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296억 달러로 연평균 18.8%씩 증가하였다(전체수입액은 8.8%씩 증가).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1992년 5위에서 2004년 2위로 올랐고, 중국이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1992년 4.6%에서 2004년 13.2%로 증가하였다.

<표3-2>에서 1992년 2004년의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對중 무역수지 흑자는 69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0.2%를 차지하였다.

<표3-3>에서는 對중국 10대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광학기기(LCD등), 석유제품, 화학섬유원료,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중간원료이다.

24) http://kita.net/newtri/china/relation/relation_01.jsp

<표3-3> 對中 10대 수출 품목[25)]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1-6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컴퓨터	3,687	96.8	반도체	3,278	98.3	반도체	3,426	155.9
2	무선통신기기	3,115	40.0	컴퓨터	5,346	45	컴퓨터	2,340	-18.3
3	철강판	2,387	86.4	철강판	3,074	28.8	철강판	1,884	29.6
4	합성수지	2,118	25.1	합성수지	3,063	44.6	합성수지	1,792	31.3
5	석유제품	1,717	46.5	무선통신기기	3,503	12.5	무선통신기기	1,792	8
6	반도체	1,653	111.5	광학기기	1,791	318.5	광학기기	1,515	72.7
7	전자관	1,128	-0.9	석유제품	2,645	54	석유제품	1,342	10.7
8	석유화학합섬원료	1,077	32.8	석유화학합섬원료	1,813	68.3	석유화학합섬원료	1,248	57.6
9	자동차부품	944	459.5	자동차부품	1,736	83.9	자동차부품	1,204	41.6
10	석유화학중간원료	872	52.9	석유화학중간원료	1,377	57.8	석유화학중간원료	798	3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MTI 3단위)

<표3-4>에서 200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상품 구조를 일차상품, 중간재, 최종재로 나누어 살펴보면, 반제품과 부품등 중간재가 79.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차상품은 0.6%, 중간재가 79.9%(반제품 43.9%, 부품35.8%), 최종재 19.7%, 자본재 16.2%, 소비재 3.5%를 차지하고 있다.

25) http://kita.net/newtri/china/relation/relation_01.jsp

<표3-4>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출액 및 증가율[26)]

(단위 : 백만달러, %)

	년 도	전품목	1차 상품	소 계	중간재 반제품	부 품	소 계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수출액	1992	2,652	12	2,355	2,228	127	285	193	92
	2001	8,187	62	15,169	11,634	3,536	2,954	2,028	927
	2002	23,712	117	18,029	12,308	5,721	5,565	4,395	1,170
	2003	35,096	181	26,846	16,199	10,648	8,068	6,525	1,543
	2004	49,749	283	39,654	21,836	17,819	9,811	8,068	1,744
연평균 증가율	92년-01년	23.9	20.3	23.0	20.2	44.7	29.7	29.8	29.3
	02년-04년	39.9	65.6	37.8	23.4	71,5	49.2	58.5	23.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작성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표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 철강판, 의류, 반도체, 석탄, 전자응용기기, 알루미늄, 정밀화학원료, 선재 봉강 및 철근, 식물성물질등이다.

26) http://kita.net/newtri/china/relation/relation_01.jsp

<표3-5> 對中 10대 수입 품목[27)]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1-6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의류	1,907	14.0	컴퓨터	961	56.8	컴퓨터	1,582	38.1
2	컴퓨터	1,492	53.1	철강판	2,093	450.1	철강판	1,311	467.6
3	반도체	1,040	56.4	의류	1,392	9.7	의류	848	-4.2
4	석탄	1,004	8.1	반도체	1,557	33.8	반도체	845	35.6
5	식물성물질	946	36.0	석탄	1,072	55.1	석탄	794	12.0
6	전자응용기기	639	64.9	전자응용기기	937	67.9	전자응용기기	579	18.4
7	알루미늄	579	65.9	알루미늄	748	61.7	알루미늄	577	41.2
8	정밀화학원료	538	14.0	정밀화학원료	541	39.0	정밀화학원료	488	40.2
9	정지기기	514	21.7	선재봉강및철근	646	142.0	선재봉강및철근	484	76.7
10	음향기기	459	-3.9	합금철 선철 및 고철	370	146.3	합금철 선철 및 고철	462	93.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MTI 3단위)

한국의 對중국 수입상품 역시 <표3-6> 보는 바와 같이 중간재가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소비재가 19.8%, 자본재가 18.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차상품은 9.1%, 중간재가 52.8%(반제품 34.2%, 부품 18.6%), 최종재가 38.1%(자본재 18.4%, 소비재 19.8%)를 차지한다.

부품, 반제품, 자본재는 중국에 대하여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차상품, 소비재는 중국에 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對中 무역수지는 일차상품은 -24억달러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중간재는 24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최종재의 적자는 -1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차상품과 소비재에서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은 취약한 반면에, 한국시장에서의

27) http://kita.net/newtri/china/relation/relation_01.jsp

중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소비재 분야의 對中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3-6> 가공단계별 對중국 무역수지 추이[28)]

(단위 : 백만달러)

년 도	전품목	1차 상품	소 계	중간재 반제품	부 품	소 계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1992	-1,071	-1,370	483	417	65	-184	97	-281
2001	4,892	-1,646	8,676	7,386	1,290	-2,132	83	-2,215
2002	6,312	-2,079	9,641	6,849	2,792	-1,245	1,810	-3,055
2003	13,186	-2,567	16,334	9,644	6,690	-574	2,818	-3,391
2004	20,163	-2,399	24,037	11,732	12,305	-1,465	2,634	-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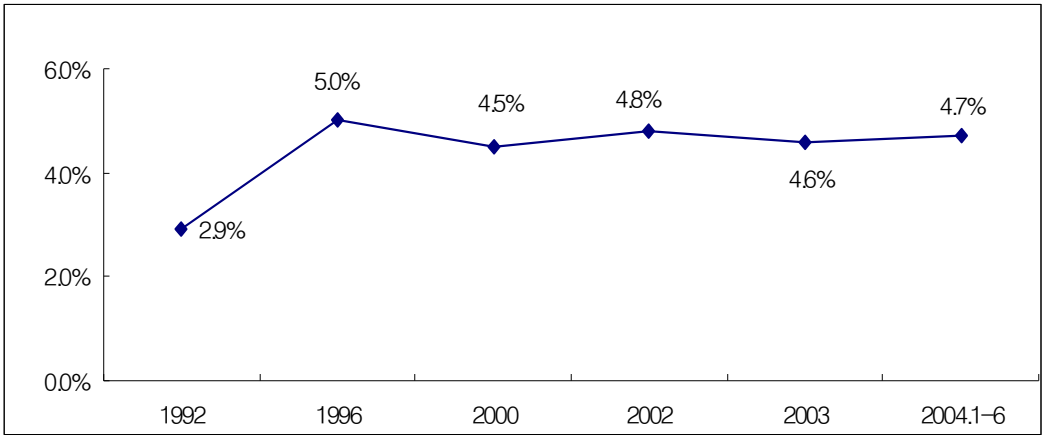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나) 중국의 對한국 수출 및 수입 현황

<그림3-1>에서 중국의 對한국 무역은 1992년 양국간의 수교를 계기로 지속적인 신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교이전 중국의 對한국 무역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989년)도 되지 않았으나 1992년 수교이후 12년간 韓·中 양국간 무역은 연 평균 20.5%의 성장률을 보인데 힘입어 2004년 상반기 현재 한국은 중국(홍콩제외)의 수출, 수입, 총 무역규모 등에서 3위로 부상하였다.

28) http://kita.net/newtri/china/relation/relation_01.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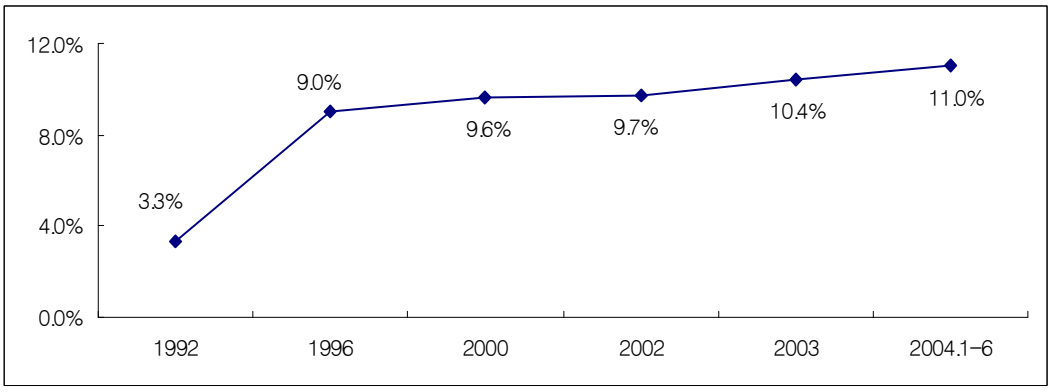
<그림3-1> 중국의 對 한국 수출비중 추이



자료: 중국해관

<그림3-2>에서 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수교이후부터 1996년까지 9.0%로 빠르게 높아졌다. 1997년에 두 자리수에 진입한 이후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 10-11%선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2004년 상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11%를 기록, 한국비중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3-2> 중국의 對 한국 수입비중 추이



자료 : 중국해관

2004년 1-6월 중 중국의 對한국 20대 수출품목 중 전기기기가 82.6억 달러로 제1

위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상품의 순위로는 광학기기(192.5%), 자동차부품(115.4%)이었다.

<표3-7> 중국의 對한국 2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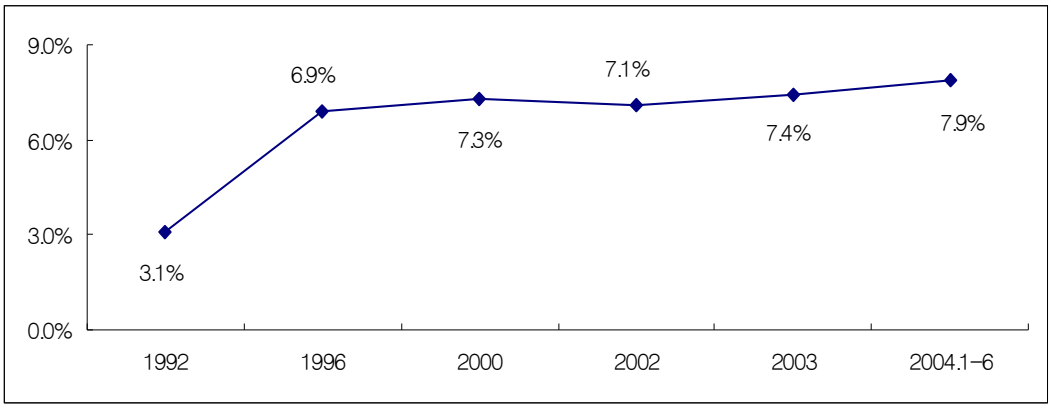
순위	품목	금액	증가율	순위	품목	금액	증가율
1	전기기기	8,257	43.9	11	원피와 가죽	303	-0.2
2	광학기기	4,575	192.5	12	철강의 제품	286	73.9
3	원자로, 보일러	3,406	60.2	13	판지와 그 제품	275	10.1
4	플라스틱	2,191	40.3	14	인조단섬유	271	8.9
5	유기 화학품	2,172	50.7	15	알루미늄	257	63.2
6	철강	2,008	38.4	16	메리야스 편물	249	7.5
7	광물섬유	1,425	51.8	17	고무와 그 제품	163	41.5
8	자동차 부품	810	115.4	18	화학공업생산품	154	28.4
9	인조장섬유	389	1.5	19	방직용 섬유제품	152	7.4
10	동과 그 제품	388	41.2	20	채소 및 건과류	148	16.6

주) 품목분류는 HS 2단위 기준

자료 : 중국해관

<그림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對한국 무역액이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교전인 1989년에 0.8%로부터 1996년 7%에 바짝 다가선데 이어 지속적으로 7%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무역액이 국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한국과의 높은 수출입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3-3> 중국의 對 한국 수출입비중 추이



자료 : 중국해관

2005년은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관세수준 점진인하 약속에 따라 많은 품목에서 큰 폭의 관세인하를 단행하는 마지막 한해이다. 이후로 관세인하 품목이나 인하폭이 대폭 감소된다. 2005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관세수준은 9.9%로 인하되며 HS코드기준 900여개 세목이 인하대상에 오른다. 산업별로 공산품 평균관세는 9.0%로 인하되며 농산품은 15.3%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가운데 수산물 평균 관세는 10.5%, 목재, 종이 및 제지품은 4.6%, 섬유 및 의류제품은 11.4%, 화공제품 6.9%, 교통도구 13.3%, 기계제품 8.0%, 전자제품은 9.1%수준대로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29]

2. 한・중 투자협력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對中 투자동향

(1) 국가별 對中 투자 동향

중국 상무부연구원에서 유럽・미국・일본・한국등 세계 1,000개 다국적기업(업종은 IT, 전자, 자동차, 화학공업, 생물제약)을 대상으로 2005~2007년간 대중국 투자

29) http://www.mofcom.gov.cn/article/200412/20041200317916_1.xml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82%의 다국적 기업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에서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출기업의 35%는 대중국 투자에 대한 사업 조정을 하겠다고 응답하여 향후 대중국 사업이 기존과 다른 분야로 조정·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0]

이처럼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우선은 중국의 고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특히 IT산업과 자동차산업이 고성장을 견인하는 추세이다. 2004년 IT산업 매출액이 2,42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구(일본포함제외)에서 중국 IT시장 점유율 전망은 2003년 30.8%에서 2008년에는 38.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수요량은 2005년에는 560만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15% 증가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중국정부의 WTO 개방 일정에 따라 대외개방의 확대에서 찾고 있다.

<표3-8>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중국내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년동기비 14.9% 증가한 2만1천688개에 달하며 계약기준 외자 유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한 727.0억 달러, 실제 투자기준으로는 12.0% 증가한 338.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한국무역협회, “2005년~2007년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투자 전망”,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05.5.23).

<표3-8> 2004년 상반기 중국의 외자유치 동향[31)]

(단위: 억 달러, %)

	허가 기준						외자유치액 (실행기준)		
	건 수			외자유치액					
	금 년 상반기	전년기	증가율 (%)	금 년 상반기	전 년 동기	증가율 (%)	금 년 상반기	전 년 동기	증가율 (%)
합 계	21,688	18,877	14.9	740.6	517.1	43.2	352.4	311.6	13.1
1.외국인 직접 투자	21,688	18,877	14.9	727.0	509.6	42.7	338.8	302.6	12.0
-합자	5,891	5,788	1.8	129.3	110.9	16.6	93.3	82.7	12.7
-합작	679	778	-12.7	37.4	31.2	20.0	17.5	22.5	-22.2
-독자	15,096	12,295	22.8	555.9	367.6	51.2	224.1	196.5	14.0
-지분 확보	22	16	37.5	4.4	-0.1	-	2.9	0.9	244.1
2.기타	0	0		13.6	7.5	80.6	14.7	9.0	51.4

자료: 중국 상무부

투자형태별로 보면 합작투자는 2003년(-24.1%)에 이어 지속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합자(合資) 및 독자(獨資)방식에 따른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등 지분확보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 기간 중 지분확보 투자건수는 22건에 계약기준 4.4억 달러, 실제 투자액은 2.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상반기 아시아 10개국·지역(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계약기준으로는 29.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실제 투자기준으로는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계약기준으로는 27.4%, 실제투자기준으로는 4.4%씩 각각 증가하는 등 지난해의 실제투자 증가폭(-22.4%)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31) 한국무역협회, “2004년 상반기 대중국 국별 투자동향”,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04.8.16), p.1.

<표3-9> 중국에서의 국가별 투자순위(실제투자 기준)

(단위 : 억불)

순위	'04년				'05.1-5월	
	국가명	건수	계약액	실행액	국가명	실행액
1	홍콩	14,719	501.38	189.98	홍콩	60.86
2	버지니아제도	2,641	193.96	67.30	버지니아제도	33.92
3	한국	5,625	139.11	62.48	일본	26.39
4	일본	3,454	91.62	54.52	한국	22.29
5	미국	3,925	121.65	39.41	미국	11.42
전체투자액		43,664	1,534.79	606.30	전체투자액	223.66

주) 버지니아제도의 투자는 다국적 자본

출처 : 중국 상무부

이 기간 중 대중국 투자 상위 10대 국가·지역은 홍콩(108.4억달러)과 버진제도(37.9억)가 여전히 1,2위를 고수했다. 그리고 한국(35.2억달러)은 일본을 제치고 3위(버진제도 제외시 2위)에 올랐으며 그 증가율이 50%를 웃돌아 주요 투자국 중 단연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일본(29.55억달러), 미국(24.3억달러), 대만(14.9억달러), 케이맨제도(15.4억달러), 싱가포르(10.96억달러), 서사모아(5.9억달러), 네델란드(5.6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국가·지역의 대중국 투자가 같은 기간 중국내 외국인 전체투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6%에 달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2002년에 27.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44.5억로 급격하게 늘어난 데 이어 이런 추세는 2004년 상반기에만 무려 35.2억 달러로 일본과 미국을 따돌리는 등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2) 한국의 對中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는 1993년 2.6억달러로(총 해외투자에서 20.87% 차지)에서 1996년 9.0억달러(총 해외투자에서 20.45% 차지)로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1년까지 점차 감소하였다가 2002년 9.8억 달러(총 해외투자에서 27.65% 차지), 2003년 14.9억달러(총 해외투자에서 39.71% 차지)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5년 5월까지 對中國 투자는 12,229건, 11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32]

<표3-10> 한국의 對中 투자현황(실제투자 기준)

(단위 : 억불)

한국측 통계(수출입은행)

	'04년	'04년까지 누계
건수	2,153건	11,362건
투자액	22.6억불	108.2억불

	'05.1-5월	'05.5까지 누계
건수	867건	12,229건
투자액	9.0억불	117.2억불

중국측 통계(상무부)

	'04년	'04년까지 누계
건수	5,625	32,753
투자액	62.5	259.4

	'05.1-5월	'05.5까지 누계
건수	-	-
투자액	22.3	281.7

중소기업의 투자 건수는 하락했으나 기업당 투자금액은 증가하였으며 중국정부의 투자절차 완화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통신장비, 수송장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별 해외직접투자는 청도, 위해, 연태가 위치한 산동성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경(LG전자), 소주(삼성전자)가 있는 강소성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다소 늘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3) 對中 투자 동향 분석[33]

1) 이윤 재투자 증가

그 동안 對中國 투자는 신규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미 세계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상태여서 신규진입은 포화상태

3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우리경제의 대 중국 의존현황과 대응전략", (2004.12.17), pp.4-5.
3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최근 대중국 해외투자 동향', (2005.5.12), pp.4-8.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자체의 높은 경제발전과 중상층 증가로 인한 잠재 소비수요 파이가 커지면서 많은 기존 중국 투자기업들이 재투자 방식을 통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미 상해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1인당 GNP는 6,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중국인들의 구매패턴이 단순소비재(TV, 자전거등)에서 고급소비재(휴대폰, AV시스템)에서 최근에는 선진국형 소비재(주택, 자동차등)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윤 재투자[34]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형태도 단순조립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 차원에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자의 이윤 재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 시행 및 이익의 본국 송금 억제조치로 자본유출 방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 재투자시 기존 납부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만약에 이익금을 국외로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상 커다란 제약은 없으나 외환당국의 엄격한 관리(송금 절차의 까다로운 심사등)로 자본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다.

2) 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 증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상무부는 2002년에 발표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이하 외국인 투자목록)'을 대체하는 새로운 목록을 발표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과잉투자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억제와 이번 목록에서 작년 긴축 대상산업이었던 제철, 알루미늄 등의 분야는 물론 폴리에스테르 생산등도 장려분야에서 제외되었다.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번 목록에서는 대형컬러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가 장려목록에 새로 포함되었으며, 자동차 주요부품과 자동차 전자장치, 섬유 및 화학분야 등의 분야에서도 세부 품목이 대부분 첨단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중국이 비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오토바이 관련 분야는 장려산업에서 삭제시켰다.

이것은 중국의 외자유치 방향은 중국이 기술이 부족한 첨단산업 위주로 선별적

34)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아직 신규투자와 재투자를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고 있어 현재 재투자에 대한 수치 파악은 불가능하다.

으로 받아들이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 업종에 대한 개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배금, 영화제작 등의 분야는 종전의 금지에서 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되었다.

중국정부는 2000년에 발표된 '중·서부지역 외국이 투자 비교 우위 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을 대체하는 새로운 목록을 발표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중·서부 목록'은 총 267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외국인 투자 비교우위 대상 분야는 광물자원 개발, 경작지환원, 특용 동·식물 자원 가공, 각 성별 비교우위 산업, 인프라서비스 산업 등이다. 과거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에서 '허가' 또는 '제한'에 속한 분야도 이번 중·서부 목록에 상당수 포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이었던 인프라 서비스업(도시가스 공급, 난방, 수도시설 건설 및 운영)등이 포함되어, 이전 목록에 비해 투자분야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대중국 투자는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의 변화에 따라 중국내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낙후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중서부 및 동북3성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3) 비제조업의 투자 증가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유통 및 물류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 업체의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업체간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마트, 까르푸, 이마트등 다국적 유통기업의 중국 진출이 봇물을 이루면서 다국적 기업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 토종 유동기업과의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월마트 42개를 비롯해 까르푸 40개, 테스코 25개등 3개 메이저 할인점만 100개 이상 진출하여 다국적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신세계는 지난 3월 26일 중국 상하이 민항구 롄화난로에 이마트 중국 3호점인 인두점을 개점을 시작으로 향후 중국내 매장을 2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대상그룹은 중국 양대 유통그룹인 상하이바이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다상궈지(大商國際)유한공사를 설립하는데 합의하였다.

(나) 중국의 對韓 투자동향[35)]

(1) 중국의 對韓 투자 현황

중국기업의 대 한국 투자는 한·중 양국 수교이전부터 이루어졌다. 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와 당시 우리 정부의 북방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교 이후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한국이 아시아 금융 위기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1999년부터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 수교이전(~1991)

1980년대 말을 전후하여 중국은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과열로 경제질서와 경제 환경을 정비하였고, 게다가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로 인해 개혁개방이 위축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은데 이 시기 투자 건수와 금액이 5건, 359만 달러로 적지만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72만 달러로 시기별 구분 가운데 가장 크다.

2) 준비기(1992~1998)

한·중 양국 수교가 중국 기업의 대 한국 투자를 공식적으로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 기업의 대 한국 투자는 무역업,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비록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투자는 인가기준으로 320건, 4,546만 달러이다.

여기에는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이 인건비, 지가 등의 생산요소가 전반적으로 비싸기는 하지만 한국기업이 고급제품 뿐만 아니라 중·저가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었고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아직 위협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

35) 김주영, "중국의 대 한국 투자 환경과 특징", 『수은해외경제』, (2004.3), pp.10-15.

국의 해외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발전기(1999～)

이 시기에는 중국으로서는 주룽지 총리가 들어서면서 1998년부터 시작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등 산업분야의 재정비가 시작되었고, 매년 4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중국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강화된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실시하는가 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M&A를 통해 유력기업을 인수하는 해외투자도 전개하였다. 이 당시 한국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 때문에 이 시기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2,501건, 4억 4,028만 달러로 중국의 대 한국 전체 투자의 88.5%, 89.0%를 차지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시기에 전기전자, 운송장비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 중국의 對韓 투자의 특징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19건이며 투자금액은 6.0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90.0%와 211.8% 증가하였다. 2004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32,753건에 비하면 아직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6)]

1) 투자건수는 많으나 소규모 투자

중국 기업의 대 한국 투자는 2003년 3월말 누계로 2,826건, 4억 8,931만 달러로 외국기업의 대 한국 전체 투자의 17.3%, 0.6%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 건수는 많지만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17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197건, 2억 6,468만 달러이고, 서비스업은 2,615건, 2억 2,356만 달러인데 이들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각각 134만 달러, 9만 달러이다. 결국 중국의 대한국 투자의

36) http :// kr2.mofcom.gov.cn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투자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11> 중국의 대 한국 업종별 투자현황(2003년 3월말 현재)

(단위 : 건, 천 달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수산업		13	873	광업		1	200
제조업	식 품	40	4,165	서비스업	건 설	23	2,757
	의 류	23	2,087		도 소 매	161	10,485
	제지및목재	7	1,630		무 역	2,088	140,843
	화 학	21	3,487		음식·숙박	171	18,841
	의 약	3	3,411		운수 창고	14	5,511
	금 속	8	2,291		기 타	158	45,118
	기 계	15	2,940				
	전기전자	24	25,880				
	운송장비	3	60,644				
	기 타	53	158,144				
	계	197	264,679		계	2,615	223,555
				총 계		2,826	489,307

자료 : 산업자원부

2) 무역, 음식등의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건수 기준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투자 중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2.5%를 차지하고,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무역, 음식, 도소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저가 제품의 시장개척 일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 중국의 대한국 투자 가운데 인가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인 건수가 총 29건이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5건, 서비스업 11건, 건설업 2건, 광업 1건이며, 이를 진출 시기별로 보면 준비기(1992~1998)에 6건, 발전기(1999~)에 23건이 이루어졌다. 주목되는 점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실험적이고 시장개척 성향이 강한 투자

중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활용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무역, 도소매 등을 위주로 실험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국의 높은 생산요소 비용을 감안하여 제조업 중심의 투자보다는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우위를 살린 시장개척 진출 전략을 띠고 있다.

4) 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심의 증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이 서비스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늘어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내 시장경쟁을 가열시키면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 육성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의 활동이 수세적 입장에서 다소 공세적 방향으로 바뀌어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 같다. 이러한 사례로 京東方電子가 하이닉스의 TFT-LCD 사업부 100%(3억 8,000만 달러)를 상하이치처(上海汽車)가 GM 대우 지분 10%(5,970만 달러)를 인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중국기업의 한국 기업 M&A는 주로 반도체, PDP, 휴대폰, 자동차 등 양국간의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2절 한・중 산업협력 현황

1. 한・중 산업협력 전개과정

한국과 중국간의 산업협력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민간의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된 계기는 1994년 3월 북경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이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시기에 중국과 「促進兩國産業合作協定」에 서명을 했다. 동 회담의 계기로 동년 6월 6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 왕충우와 황병태 한국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신하여 「중한산업협력위

원회」설립에 관한 협의와 「민간 항공 공업기술 합작과 개발에 관한 양해 비망록」이 체결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동월 서울에서는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려 쌍방은 자동차, 민간 항공기, HDTV, TDX등 4개 영역의 관련 기업이 산업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지와 장려를 희망했으며 양국은 자동차, 민간항공기, HDTV, TDX등 4개 분야를 우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산업협력위원회는 상기 4개 분야에서의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상반기까지 1994년 6월 북경, 1995년 6월 역시 북경, 1996년 8월 서울등 3차례 본 회의와 1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들 빈번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산업협력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양국 산업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우선 산업협력에 대한 양국 시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측은 공동생산, 공동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는 반면, 중국측은 연구개발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이 서로 산업협력의 주도적 위치 확보를 위해 줄다리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양국 모두 중형 항공기 조종 조립장 설치에 대해 각각 자국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전자 교환기영역(TDX)에 있어서 한국은 양국에 각각의 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중국은 북경 우전 대학에 하나의 공동연구 센터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측의 지나친 실리적 협상 자세는 산업협력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즉 양국은 협력지분의 비율에 대한 합의 등을 토대로 개발기종, 경제성 분석, 협력방식, 개발일정 등에 관해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중국측의 '新4원칙'(중국에 의한 사업주도, 중국의 다수지분 보유, 중국내 최종 조립장 설치, 중국내 합자회사 설립)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측의 소수 지분 참여를 요구하며 협상 결렬을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긴요한 자금의 결핍을 들 수 있다.[37]

---

37) 신태용,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중 산업협력에의 시사』, (산업연구원, 1997.7), pp.102-103.

<표3-12> 한·중 산업정책의 개괄적 비교[38)]

	한 국	중 국
기본방향과 위상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줄이고 시장실패가 현저한 부문에 국한 하여 국제규범에 맞는 지원수단을 활용 ·비재량적 유인에 대부분 의존 ·개별연대에는 5개년 계획과 궤도를 같이 하면서 자원배분에 큰 영향력을 발휘	·국가의 거시조절 능력 강화, 개선에 최대 목표 ·경제개발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조 ·재량적 할당에 크게 의존(예:지주산업 지정등) ·개발계획과 별도로 추진, 경제개혁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취약
산업구조 정책	·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중점	·SOC개발 및 확충, 공업부문에서의 지주산업 육성, 제3차산업 육성에 중점
산업기술 정책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 기술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에 역점	·과학기술 성과의 생산력으로의 轉化 및 기업중심의 연구개발체제의 구축에 역점
산업배치 정책	·공업단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동 단지는 전반적인 산업정책, 국토종합개발계획, 인구정책, 기술개발정책 등과 유기적 연관하에서 추진	·중서부 내륙 개발 및 고신기술 개발구 설치 그러나 전반적인 산업정책 및 여타 계획과의 연계성 취약
산업조직 및 기업구조 조정정책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에 대한 5대개혁등 기업의 국제규범에 합치한 구조조정 가속화	·기업의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집단화정책 추구로 국제경쟁력 확보 ·행정과 기업의 분리를 위한 현대기업제도 관철에 역점

위의 <표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이미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은 전면적인 공업화 단계에 처해 있어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한국에서는 신흥 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주산업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 시 中國長江大橋 등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건의 중대한 기간 공정의 건조 정부계획에 협의를 달성함으로써 중국의 지주산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협력을 증진 시켰으

38) 신태용, 상게논문, p.105.

며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협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39]

또한 한국이 해외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營造 기술을 중국의 노동자와 결합하여 해외 營建시장에 진출하며, 한국기업은 중국의 고속전철, 철도건설, 철도차량 建造 개발 및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아시아 횡단 철도 등의 협력사항에 대해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동시에 「철도 협력과 교류에 관한 협의」를 이미 체결하였다.

2. 한·중 분야별 산업협력 확대와 현황*40)*

2003년 7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수행중인 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 主任과 한·중 산업장관회담을 가진데 이어 뤼푸위엔 상무부 부장과 제2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양국은 한·중 산업장관회담에서 그 동안의 양국간 산업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산업협력위원회의 구성을 부분적으로 개편하며 그 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이 때의 산업장관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중국측의 요청에 따라 한전 강동석 사장과 광진공의 박춘택 사장이 배석하여 각사가 추진 중인 전력 및 자원개발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중국측은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IT분야, 2008년 북경올림픽 협력, 물류·유통분야, 중서부지역 자원개발 사업, 중국 화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자동차, 철강, 고속철도, 환경산업, NT·BT분야등 10대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41]

(가) IT/NT/BT 분야 협력

양국은 IT분야의 협력채널로 한·중·일 IT장관회의, 한·중·일 IT국장급 전문

39) 『文匯報』(홍콩), 1998.11.13, p.A6.
40) http//kita.net/newtri/china/relation/relation_01.jsp
41)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인용, 2003.07.09

가 회의, 전파국장회의, 한·중·일 IT표준화 회의, 7개 분야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중이다. 이러한 7개 분야의 실무협의체에서는 3G 및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인터넷, 통신망안전 및 정보보호, 통신서비스 정책, 공개소프트웨어, 디지털 TV, 방송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NT분야에서는 소규모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인력 및 정보교류등 도입단계로서 양국간 협력 거점으로 1997년 한·중 신소재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한·중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조사단을 파견하고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등의 협력사업을 수행중이다.

BT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의 한·중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에 설립한 한·중생명공합협력센터(Korea-China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Cooperation Center)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중 생명공학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개인 연구자간의 협력사업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2008*년 북경올림픽 협력

2002년 9월 제1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 북경올림픽 지원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 2003년 9월 제2차 한·중·일 IT장관 회의 개최시 2008년 북경올림픽 지원에 관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통신망 안전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등에 관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다) 물류·유통분야 협력

한-중 정상회담(2003.7),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2003.10), 제11차 한-중 무역실무회담(2003.1.1)의 주요 경협과제로 채택되었다. 「한·중 유통물류 민간협력 추진협의회」구성으로 국내 민간으로 중국 진출의 협력기반을 조성하였다(2004.3.18)

(라) 중서부지역 자원개발 사업 및 중국 화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섬서성 희토류 가공공장 합작설립, 섬서성 항래만 유연탄 프로젝트 합작투자 사업, 중국 남슈리거 광구 개발사업등을 추진하였고, 중국 하남성 무척 순환유동층열병합발전소 건설, 운영 사업 추진 협력, 중국 내몽고 순환유동층석탄발전소 사업 추진 협력, 중국 하남성 초작시 구리산 화력발전소 사업 추진 협력을 논의하였다. 원자력발전에서도 양국정부와 관련기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마) 자동차 및 철강 분야 협력

한·중간 자동차 분야의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중국내 자동차 조립공장 진출, 완성차업체가 진출한 지역의 부품업체도 동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SAIC)가 한국 쌍용자동차 지분 48.9%(5억달러 투자)로 인수하였다(2004.10).

대중 투자는 과거에는 코일센터 등 단순가공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1건다 3,521만 달러에 머물렀으나, 투자가 제강공정으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1건당 3억 1,317만 달러로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대중 투자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투자 성격도 시장확보를 위한 투자에서 생산기지 또는 제3국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로 확대하고 있어 기존의 단순가공 위주의 하공정 투자에서 점차 대규모 자본을 요구하는 상공정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바) 고속철도 협력

철도분야 교류협력약정 체결(1998.11)로 중국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중 정상회담시 10대 경협사업에 “중국 고속철도 건설협력”사업을 포함시켰다.

(사) 환경산업 협력

1993년 10월 '한・중 환경협력협정"체결을 계기로 환경산업협력이 시작되었다. 동 협정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9차례에 걸쳐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1년 6월부터 '한・중・일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여 3국간 환경산업・기술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 및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환경산업 협력강화 및 환경산업투자포럼 개최"를 채택하고 10대 경협사업으로 환경산업을 선정하였다.

제3절 한・중 경제협력 관계의 분석

1. 한・중 경제협력의 경제적 성과

(가) 교역규모의 확대

수교 당시인 1992년 26.5억 달러였던 대중 수출은 2001년 181.9억 달러로 6.7배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 증가폭(1.9배)을 크게 앞질렀으며, 중국은 1992년 우리나라 제6위의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01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2위로 부상하였다. 대중 무역수지는 한・중 수교 이전 해마다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였으나, 수교를 계기로 1993년부터 큰폭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1992년 수교 이후 대중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 투자기업의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한・중 교역은 중국의 수출증가에 다른 수출용 원자재 및 세계의 생산기지화에 따른 부품・소재의 수입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SOC등 인프라 투자확대에 따른 플랜트, 기자재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IT제품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도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지난해와 같이 핸드폰, 컴퓨터 등의 산업용전자, 전자부품, 자동차, 정밀기계 등이 호조될 전망이며 중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주력 수출품

목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소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 對中수출의존도 급상승

대중 수출의존도는 1992년 3%대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 12%를 넘어섰으며 같은 기간 중 미국과 일본시장 의존도는 각각 23.6%에서 20.8%로, 15.1%에서 10.9%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중간재와 일차상품 수출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최종재의 비중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비중(19.6%)의 절반수준(8.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2년 대중국 수입의 37%를 차지하던 일차상품 비중은 90년대 중반에는 20% 내외로 하락하였으며 2002년에는 10%이하로 하락하였다. 중간재중 반제품 비중은 하락하였으나, 부품 비중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수입시장엣 한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을 취약한 반면, 한국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소비재분야의 대중 무역적자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 수출품목 구조개선

그 동안의 對中 수출상품 중에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83.0%에서 2002년 74.7%로 감소하여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진전되었다. 대중국 수출에서 철강제품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국이 세계의 가전, 통신기기등의 생산기지로 전환되고, 내수가 확대되면서 전자부품과 산업용 전자제품이 대중국 수출 주력 상품으로 부상하였다.

(라) 투자규모 및 투자지역의 확대

1992년 12월 271건, 2억 6백만 달러였던 대중 투자금액(실행기준 누계)은 2004년 누계까지 1,362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중 주춤했던 대중 투자는 2000

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투자지역을 보면 주로 산동성과 동북 3성 지역들이 우리 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중국 투자의 30%이상을 동북 3성에 투자하였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동포인력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동북 3성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유는 시장경제의식의 미비와 소비시장 협소, 투자환경 미비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국유기업의 개혁과 북한의 개방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2. 한・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가) 한・중 교역관계의 문제점과 전망 *42)*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구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국 수출상품의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대중국 수출 확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산 반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입대체 가속화의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의 교역패턴이 반제품과 부품수입에서 가공 또는 조립, 최종재를 수출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가공무역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부품과 반제품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중간재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내수시장을 개방하면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외자기업들이 중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내에 소재와 Module 공장 설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내 대형 석유화학 콤비나트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석유화학 소재분야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2) 한국무역협회, “가공단계별 한・중간 무역구조 변화 분석”,『무역연구소』, (2005.5.26), pp.28-31.

그리고 중국내 한국계 기업의 중간재 현지조달 강화에 따른 대중국 반제품 및 부품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중국 내수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소비재 산업(전자제품, 자동차등)에서 중국내 부품과 Module 제품 공장 설립이 확대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반제품과 부품 수입비중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둘째는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 확대 가능성이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제품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에서 점차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제품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 중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1.5%에서 2004년에는 18.7%로 높아졌으며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12.2%에서 17.8%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2002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소비재 비중은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재와 일부 반제품에서 경쟁력을 유지했던 중국이 자본재와 부품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이전의 반제품 조립업종에서 점차 부품업종으로 전환되면서 한국계 부품기업에 의한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소비재의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대중국 소비재 수입이 급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한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종전의 농산물과 노동집약적 제품(의류, 신발, 완구, 피혁, 잡제품등)에서 점차 전자제품 분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한·중 산업관계의 문제점과 전망43)

중국산업의 고성장에 따른 한국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산업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노동력, 수많은 엔지니어, 거대한 내수시장,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중국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업의 고성장에 따라 한국 제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공동화의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예를

43) 최 봉, "우리경제의 활로 중국시장", 『삼성경제연구소』, (2002.3), pp.1-5.

들면 중국의 제조공정에서 경쟁력에 대한 매력으로 한국의 주요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과 중국 토종기업들의 기술발전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기업과 자기브랜드로 경쟁하는 중국의 토착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산업이 단순한 가격우위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기술발전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전이나 자동차, 조선 등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기업에 도전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기존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먼저 최근 중국의 고성장이 저임노동력을 기반으로 제조비용의 우위와 외자계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분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수출이 1,000만 달러 이상인 904개의 수출상품에서 484개(53.5%)만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420개(46.5%)는 중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절대우위인 품목은 213개(23.6%), 2년간 격차가 축소된 것은 147개(16.3%), 한국의 우위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은 68개(7.5%)에 그쳤다. 반면에 중국이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은 100개(11.1%), 우리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품목은 139개(15.4%), 격차가 축소되는 품목은 52개(5.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유사한 산업분야의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으로 경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산업화 국가로 세계시장에서의 국제분업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는데 후발산업화 국가의 장점인 생산공정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은 IT산업등 첨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섬유, 조선, 전자업종에 이어 반도체 산업에서도 맹추격을 해오고 있다. 대만의 중국 투자제한 조치의 폐지로 대만 IT산업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한국 IT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분야의 핵심부품 개발로 현재의 원부자재 공급에 의한 한국의 무역흑자구도 역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부품산업의 발전으로 중국 기업들의 중국내 원자재 조달비율이

높아지고, 한국의 원자재 생산 창구가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의 무역흑자의 지속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중 투자관계의 문제점과 전망

투자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투자목적과 지역별 경영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지리적 인접성과 조선족 인력활용여건만을 고려함에 따라 산둥성 등지에서는 한국투자기업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초래되기도 하고 투자진출 후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섬유나, 의류, 전기전자, 신발, 가죽등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제3국 수출형 제조업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내수시장 진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공무역형 투자 위주로써 내수시장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다.

초창기 한국기업들은 무조건적으로 독자기업을 선호해 토지임차등 경비부담 과다로 인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최근 중국의 개방확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독자투자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런 독자기업 선호경향은 코스트 부담 외에도 내수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홍콩과 대만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자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표하면 공동으로 대응하지만 한국기업들은 응집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사내 중국전문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진출·투자하고 있다. 이는 자연히 현지 조선족 인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져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제4장 한·중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제1절 한·중 교역의 활성화 방안

한국의 대중국 교역 문제점을 살펴보면 원부자재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1993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는 중국측의 우려를 자아내어 마늘분쟁이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등 통산 분쟁이 격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화 정책 이후로 해외시장에서의 중국제품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한·중 교역에서 한국제품은 갈수록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한·중 교역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시장변화에 맞춘 새로운 주력수출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수출구조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차별화된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핸드폰을 위시한 무선통신기기라든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의 디지털제품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입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수입 증가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액정디바이스, 광섬유, 반도체(IC), 프린터 등 IT관련제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중국 수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세계 생산기지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의 경우, 수출확대에 따른 기초소재 및 부품수입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쟁을 피하고 핵심부품 및 소재, 중간재공급에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경쟁국의 시장잠식에 대비한 제품차별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 국가의 제품은 한국과의 경합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에 대한 시장잠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는 대만제품 그리고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 및 노하우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만에 의한 시장잠식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대만과는 석유화학, 화학섬유, 전자부

품, 반도체, 컴퓨터등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 전 분야에서 경합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무역창구를 통한 중국 화남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국의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지방에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수입대체 가능분야에 대한 현지생산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국내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술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중국산에 의한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석유화학, 특수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현재 한국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신중히 고려하여 현지생산을 강화함으로써 중국보다 한발 앞서 사전에 중국의 수입대체현상을 미리 감안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중국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이 세계유수 다국적기업의 생산 및 글로벌 소싱기지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만으로는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 주력 수출제품의 중국내 경쟁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1/3이상이 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국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결합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서비스분야와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중국 내의 중국계 유통기업과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다양한 수출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한·중간 무역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WTO 체제하에서 무역인프라의 확충은 어느 때보다 유용한 무역확대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간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관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동시에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한·중간 무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할 전자무역 분야에서 한·중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간 전자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T인력교류, 기술제휴 및 공동 기술개발,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 등의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대중국 통상협상능력 강화와 중국 통상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제2절 대중국 투자의 활성화 방안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 WTO의 가입, 2008년 올림픽 개최, 서부대개발등 대중국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이며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투자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현지조사 및 검토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국 투자기업의 철수현황에서 나타났듯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철수에서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사전투자 검토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투자이며, 그 다음으로는 급격한 시장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합작당사자와의 불화나 제도적 문제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중국 진출에 앞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 경쟁기업의 기술력 등의 시장현황 조사선행과 함께 합작기업의 사업능력 검토가 필수적이다. 합작기업의 설립시 제반 투자절차와 법률적 준수 사항은 기존 기업과 다를 바 없다. 기술 이전 후 합작업체와의 불화로 철수한다면 나중에 합작업체가 경쟁대상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는 1990년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차이나드림'을 꿈꾸며 진출하면서 겪었던 경험이기도 하다.

둘째, 장기적인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GDP가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시장규모 측면에서나 시장역동성 측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국인 만큼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시장개척 능력을 갖춘 대중국 투자진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중국 진출은 단순히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활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에서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

하다. 즉 종업원 관리현지화, 마케팅현지화, 현지 법률 및 제도에의 적응 등에 있어 중국식 사고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많은 중국 투자기업들의 경험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현지화 경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며 당장 수익을 내려하기보다는 기업 이미지구축과 함께 합작파트너 및 유관기관과의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내수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수판매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 기업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업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기존의 수출지향의 투자개념에서 벗어나 내수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 대중국 투자를 적극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실질구매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해 및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내수를 겨냥한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급속한 경제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른 지역 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들 지역의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유통망구축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기존의 저임금을 이용한 소규모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중국내 산업발전 및 이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하여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산업발전 속도 및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은 바야흐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현지기업과의 경쟁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투자에 주력함으로써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 서북부지역에 대한 선점적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선점적 전출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 서부지역은 지리적 취약성과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시기와 방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나, 그 개발 잠재력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섯째, 인수·합병 형태의 투자진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방식의 하나로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수·합병 형태의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형태로는 주로 독자, 합자 등 형태가 있으며 이런 투자진출형태는 사업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부담이 큰 약점들이 있고 최근 중국정부가 허용한 인수·합병 형태의 투자방식은 기존 투자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적은 사업비용으로도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중국기업보다 우위인 단지 선진적인 기술, 선진적인 기업관리 등으로도 중국진출이 가능한 새로운 형식의 투자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은 인수·합병 형태의 대중국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과제

1. 대외적 측면

(가) 신국제질서의 형성과 한중 관계 변화인식

중국은 향후 강대국화 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일등 서방제국으로부터 거센 견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향후 수십 년 내에 미국과 맞먹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서방 최대의 자본주의 선진국가로 오늘날 서구문명을 대표하는 세계 패권국이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인 동시에 동양 문화의 총본산이다. 오늘날 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각기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정치적으로는 갈등하고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는 이중구조적 관계에 놓여 있다. 양국은 한국의 제1, 제2위의 무역투자 대상국들이다. 한국은 이들 양국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양국과 양국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안보, 사회등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양국의 공동 이해가 한국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에 대하여 균형감각을 전체로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일찍이 과거 한국 역사에 없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지역감정과 보혁대립이라는 이중적 모순구조를 안고 있는 동시에 북한과 50여년을 대치하는 힘겨운 역사적, 사회적 부담 속에서 수출의존적 경제발전을 사회안정의 활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미·중 양대 초강국시대를 맞아 균형실리외교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의 재발견 등 한국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지역, 종래의 발전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체제모델을 모색하는 작업, 해외정보 수집과 처리과정을 선진화하는 작업, 국제사회를 보는 한국 자신의 시각을 추구하는 작업등이 새로운 계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 외에 전략적 접근을 전제로 중국에 관하여 체제와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을 다루는 전문적인 중국연구기구, 또는 미국과 중국을 아울러 연구하는 기구를 발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화교경제권 연계발전에 대응

중국경제는 중국대륙에 시야를 한정해서는 전체 중국경제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홍콩과 대만은 물론 동남아 화교경제권이 중국경제에 가세하여 블록화 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화·화교경제권의 결속과 발전은 한국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미·일을 비롯하여 주변 관련국들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은 격화될 것이고 통상관계도 순탄할 수 만은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경제권 및 한·중·일 3국간 협력에 외교적 비중을 높이는 한편, 화교경제권을 하나의 역내 경제권으로 보고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점진적으로 이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하면서 역내의 각 현지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운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중 경협 연계의 필요성

한국은 지금 남북한 관계개선을 토대로 중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한반도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중간 협력의 확대 강호는 북한을 고립화하고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은 물론 중국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 우방이며,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에 관하여 가장 가까운 모델은 중국일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안보에서 경제까지 불가피한 협력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런 점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은 한·중간에 장기적으로 순조로운 경제협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관계개선은 한반도 안정 및 한·중 경협의 전제이자 촉매가 될 것이며,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통일로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된다. 일부 서방측에서는 남북한 대치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 지역이 시간이 흐를수록 대규모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역'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전쟁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지역이 북미경제권, EU경제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론을 강조하고 있다.

위기 가능성을 줄이고 발전의 기회를 움켜잡는 것은 한국의 몫이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방식이 가장 요구되는 전환기적 시점이다. 순조롭게 남북한 관계개선을 추진하는데 한국 국내의 여론 수렴작업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여론 분열이 전략적인 대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감정과 보혁대립이 극단화하는 현상은 한국사회를 불안정의 악순환 구조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대 북한 정책이 대 중국 정책과 내면적으로 연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건전한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정파를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 북한 접근에도 효율적임은 물론 중국시장의 급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분단국들의 아픔이 봉합되는 추세를 보이는 속에서, 오늘날 남북한 사회는 오랜 적대적 단절상황 속에서 각기 불안이 사회적으로 체질화되어 견디기 힘든 부작용들이 확산일로에 있다. 남북한 관계개선은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안정을 회복하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일차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 내부적 측면

(가) 전문적인 대응 메커니즘 수립

한국은 중국의 체제, 문화 및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사회전반이 대체적으로 공통인식을 갖고 중국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제 각각의 환상이나 착각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 부정확하고 뒤늦은 정보에 대한 타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 각 부처는 순환 보직제와 미국 및 중국 등 지역통산 전문가육성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언론은 한국사회의 대중국 시장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기능을 강화하며, 기업은 글로벌차원의 중국통산 전문인재를 대량으로 발굴 육성하며, 교육기관은 중국어학과를 설치하여 중국문화를 배우게 함으로써 중국 전문적 대응 메카니즘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산·학·연·관이 종횡으로 연구·토론의 공간을 엮어 중국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

일에 의존하는 중국에 대한 2차 정보 이용에서 오는 비효율을 막고 한국적 시각으로 한국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더 이상 특수지역이 아니며 글로벌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로 일반지식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국의 잠재력을 올바로 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제조건은 종래의 비정상적인 한·중 관계하에서 중국을 보던 시각을 탈피하여 오늘날 중국변혁의 실상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작업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대응 메카니즘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나) 불균형 체제에 대응하는 다양화의 접근 필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른 다양하고 독특한 역사·문화·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체제 면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규모는 1조 달러를 초과하는 대국이지만, 일인당 소득수준은 800달러대의 빈곤한 개도국이다. 또한 거시적 측면에서는 물가안정과 고속성장 등 낙관적이지만 미시적으로는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부실기업 문제의 심각성 등 비판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지역적으로 동부 연안지역과 서부내륙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심각한 정도이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해방이전 반식민지 혼란상태에서 해방 후 폐쇄적 계획경제 실시, 그리고 80년대 현대화 개방정책 착수와 90년대 시장 경제 추진등 격변의 와중을 헤쳐왔다. 오늘날 중국의 격변은 지난 현대사의 고난과 혼란속에 감추어졌던 변화욕구가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의 격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격변의 파도 속에서 각 분야 발전의 불균형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불균형은 개도국의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경우 광대한 지역을 무대로 심각한 불균형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시장접근방식에서 소비계층에 따른 제품차별화, 문화적·경제적 차이에 따른 지역별전략의 다각화 등 시장특성에 부합하는 세분화된 전략과 이에 정통한 지역별·계층별 상품 전문가가 요구된다. 중국시장 특유의 불균형 성과 격변의 흐름을 기민하게 추적하고 대응한다면 효율적인 시장접근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탄력적인 대외경제협력 인프라 구축

중국시장은 부단히 변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일·EU등 선진국의 선진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특히 한국은 수교이래 지난 10년과는 다른 경협패턴 및 상황이 점차 출현할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력과 함께 변화를 이끄는 창의력을 갖춘 탄력적인 대응 인프라를 수립해야 한다.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감각과 중국 감각을 고루 갖춘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육성·배치하여 현지 업무 분위기를 일신하고 현지와 국내에 최신 정보를 분석하는 대·소규모의 연구체제를 조직적으로 활성화하여 산·학·연 협조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 WTO과 2008년 올림픽유치, 서부대개발등에 대비

개도국이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세계경제는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편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대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 불균형의 이중성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수출이 부진할 경우 거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여유를 지니고 있어 내수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한국과는 입장이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이제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은 대중국 투자 및 교역의 확대가 확

실시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은 한국에게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매력있고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어 한국의 진출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할 시장이 아닐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과의 수출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의 수출증대 효과보다 외자유치 감소로 인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출증대 효과도 단기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제3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사회주의체제인 중국보다 기업규제가 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비하여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자유치는 물론 국내기업도 활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제3시장에서의 경쟁에 대비하는 접근방법은 관련제품이나 업종을 과감하게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정부는 전략적으로 특정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유치를 계기로 결집된 국민적 에너지를 활용하여 개혁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올림픽 관련 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5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올림픽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거대한 투자를 감안할 때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체제개혁과 시장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올림픽 수요와 관련하여 건설, 교통, 통신, 광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시장 변화의 가속화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여 한국과의 경쟁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변화에 기인한 대응 이외의 선택이 없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서부대개발 사업은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총투자규모 500억 달러가 넘는 다목적 장기사업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장기에 걸쳐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는 인프라, 자원, 첨단, 환경

등 일부 진출유망업종에 접근하면서 서부의 거점지역과 주요업종을 선정하여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시장조사를 비롯한 투자환경 정보수집, 지방정부와의 인맥형성에 주력하고 이어서 초기단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진출을 연계시키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래로 양국은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그 동안 한국기업들에게도 많은 수출 및 투자기회를 주었다. 21세기에도 한·중 양국은 더욱 긴밀하고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동시에 양국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졌다. 1993년 이후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오고 있으며 이는 중국측의 우려를 자아내어 마늘 분쟁이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제품의 주요 시장점유율은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위협에 비교적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해외 시장에서 중국의 위협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중 교역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는 중국시장변화에 맞춘 새로운 주력수출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장잠식에 대비한 제품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는 중국의 수입대체 가능분야에 대한 현지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중국 교역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무역인프라 분야의 협력 강화와 대중국 통상협상능력의 강화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투자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는 중국현지조사 및 검토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장기적인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는 내수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 투자진출방안 모색과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서북부지역에 대한 선점적 투자진출방안의 모색과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은 인수·합병 형태의 투자진출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협력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먼저 대외적 측면으로는 신국제질서의 형

성과 한·중 관계의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과 화교경제권 연계발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중 경협 연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내부적인 측면으로는 중국의 체제나 문화 및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 메카니즘을 수립하는 것과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불균형 체제에 대응하는 다양화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북경올림픽 유치와 서부대개발등에 대비하여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기회이면서 위협으로 다가온 중국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대응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1999.

김정식. 『중국경제발전의 이해』.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3.

김주영. “중국의 대 한국 투자 현황과 특징”, 『수은해외경제』, 2004.

김학균.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번영사, 1987.

강봉균. “중국경제의 부상과 우리기업의 대응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신태용.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중 산업협력에의 시사』, 산업연구원, 1997.

유진석. “2004년 중국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제429호, 2003.

유진석. “한・중 수교 10년의 회고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제362호 2002.

유진석. “우리나라의 대중국 진출확대의 방향”.『삼성경제연구소』. 2001.

이영주. 『중국의 신외교 전략과 한중관계』. 나남출판, 1998.

이주영.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나남출판, 1998.

이재우. “대중국 해외투자가 대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WTO 가입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수은해외경제』, 2004.

이창재외 2인.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7.8)

양영자. 『한중경제교류협력의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만 중국문화대학, 2001.

정상은. “중국경제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제409호, 2003.

전득주외.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8.

탁세령. “중국 무역흑자 1998년 이후 최대기록”. 『수은해외경제』, 2005.

한국금융연구원. “중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12권1호, 2003.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년 중국 100대 수출기업 중 한국계 기업 10개”. 『한국무역협회』, 2005.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고유브랜드 수출현황 및 대응책”,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05.

_____. “위안화 평가절상 단행과 우리수출에 대한 영향”,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05.

_____. “가공단계별 한・중간 무역구조 변화분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대중국 해외투자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5.5.12)

_____. “ 중국의 대 한국 투자 현황과 특징”, 『수은해외경제』, 2004.

_____. “ 우리 경제의 대 중국 의존현황과 대응전략”. 『한국수출입은행』 200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한중 수교 10주년 명암과 과제”. 2002.

【외국문헌】

China Monthly Statistics-China Statistical Information and Consultancy Service Center(Beijing). Vol.1.2000.

Chu Sung Po, "Peking's Relations with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1980s," Issues and Studies. Vol.22.No.11(Taipei : November 1986).

FBIS, East Asia. August 8 1988.

FBIS, East Asia. August 8 1989.

Fei-Ling Wang. "Joining the Major Powers for the Status Quo : China's Views and Policy on Korean Reunifivation," Pacific Affairs. Vol.72. No.2. summer 1999.

【인터넷 사이트】

www. 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 koreaexim.go.kr/kr/oeis/(한국수출입은행)

www. mofat.go.kr/mofat/(외교통상부)

www. nso.go.kr/newnso/(통계청)

www. koreaemb.org.cn/contents/(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www. kiet.re.kr/kiet/portal/(산업연구원)

www. seri.org(삼성경제연구소)

www. kotra.or.kr/main/trade/economy/(digital kotra)

www. kiet.net/portal/china/(한국무역협회 China Portal)

www. korea-china.org/(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상해지부)

www. kita.net/top/state/(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 kita.net/newtri/china/relation/(무역연구소)

http:// kr2.mofcom.gov.cn(한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경제상무참사처)